

고향사랑답례품 ‘삼겹살’ 인기… 지역경제 ‘숨통’

SOCIETY

2025년 4월 11일 금요일

동구 남광주시장 ‘자연축산’ 업체 작년 12월 2억 매출 떡·굴비 등 타 업체도 동참…상인들 판매 증가 ‘화색’

광주 동구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인 남광주시장 삼겹살·목살이 지역경제 선순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0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자연축산’ 업체에서 제공되는 한돈 삼겹살·목살 신청 건수만 7037건에 달해 2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이 같은 매출 비결은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기부자를 만족시킬만한 품질 좋은 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를 선택한 것이 주요 요인이다. 김응기 자연축산 대표도 다른 지역 업체의 상품을 분석하며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했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받을 수 있는데, 자연축산 답례품은 일반적으로 마트 구입 중량(600~800g)보다 적어

한 국내산 1+등급 압태지(1.3kg 이상)를 받을 수 있다.

구청 직원들도 발품을 팔며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확보에 힘을 보탰다.

담당 직원들이 답례품 발굴을 위해 전 통시장을 누비며 적합한 업체를 찾아냈다. 동구는 지리적 특성상 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특산물과 공산품이 부족하다. 주문이 밀려 일손이 부족할 때는 택배 포장 지원 등 소상공인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였다는 후문이다.

이번 사례가 상인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면서 다른 업체들도 동참하는 추세다.

동구는 최근 답례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특미 참기름’, ‘해뜨랑 협동조합(소내장 추어탕)’, ‘최재호 김치’, ‘그린스토어(홍어 무침)’, ‘유명떡집(수제한과)’, ‘영광 굴비(구운 감오징어·보리굴비)’ 등 총 6곳을 최종 선정했다.

동구는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답례품을 추가 발굴·구성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임택 정장은 “남광주시장 삼겹살과 목

살이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전통시장 내 다른 업체까지 동참하면서 기부자는 물론 지역 소상공인이 숨통을 트일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게 됐다”며 “기부자에게 만족스러운 답례품 제공으로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동구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1위를 달성했다. 2023년 제도 시행 이후 2년간 총 3만1578명의 기부자가 참여해 33억여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다. 올해 목표 금액은 50억원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

서구-인권위, 사회복지사 경력 산정 ‘이전’

“지침 없다” vs “차별적 관행”

국가인권위원회가 과거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광주 서구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의 진정에 ‘임금 차별에 해당하는’며 시정 권고를 내린 것을 두고 서구가 난감한 입장을 내비쳤다.

서구는 설명자료를 통해 “진정인의 경우 인권법 전액을 국·시비로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을 비롯해 관련 보건복지부와 광주시 지침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 또는 시설 근무경력을 임의로 인정할 수 없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시에 별도의 경력인정 지침 수립계획 여부에 대한 입장(공문)을 요청했으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야 하며 별도 지침을 새로 수립할 계획이 없다는 구 두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인권위에 진정인 근무경력을 입증할 세부자료를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해 관련 내용을 재차 요청한 상태이고, 경력 인정 근거가 문서로 확인될 시 광주

시와 자원예산 등을 재협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정인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서구 관내 사단법인 광주여성외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원으로 채용됐다.

같은 해 10월부터 현재까지 광주여성외전화 부설기관인 ‘성매매 피해자 쉼터 시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A씨는 현 직장(광주여성외전화)에서 “과거 재직했던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임금 차별을 받는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가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력은 국가인권위원회 B인권사무소에서 근무한 약 11년 7개월(2010년 8월 1일~2022년 2월 28일)이다.

서구가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따라 경력을 정해 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해당 경력이 누락됐다는 주장이다.

실제 A씨는 채용 당시 국가인권위 경력은 인정받지 못하고, 과거 여성권익시설에서 근무한 7년간의 경력만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용성 기자 yo1404@

광산구·공무원노조, 폭언·협박한 민원인 고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광산구지부와 광산구가 10일 공무원을 협박하고, 악의적 민원 제기과 도를 넘는 정보 공개 청구를 일삼아 온 민원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무원노조와 광산구는 지난 9일 악성 민원인 A씨에 대해 공무원징벌, 스톱킨처벌법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245건의 민원을 제기하고, 특히 지난 2월 한 달 동안만 50건의 민원제기를 통해 업무 담당자 인사 조치·징계처분·감사 요구, 언론사 제보 및 고발 협박 등으로 업무 담당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업무담당자에게

‘퇴근길 조심해라’, ‘사람 잘 때린다’ 등 폭언과 조롱을 일삼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노조는 악성 민원인 고발 조치와 함께 피해 공무원에 대해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휴게시간 부여, 인사 상담 등 보호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악성 민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양승봉 공무원노조 광산구지부장은 “악성 민원은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괴롭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수사기관은 철저히 수사해 엄정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jh4415@



서창동 나눔누리숲 현장 점검 10일 광주 서구 서창동 나눔누리숲 조성사업 현장에서 김이강 서구청장과 공무원들이 역사쉼터와 노을쉼터 및 주민편의시설 등을 살펴보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전남대·조선대 의대, 대면 수업 참여율 저조

제적 피하고 대정부 투쟁…대학 측, 징계는 고려 안 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동맹 휴학에 나섰다가 최근 복학한 전남대·조선대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정할 때 실제 수업 참여율을 복기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한 만큼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남대 의대는 지난해 최종 복학 신청을 마친 재적 학생 중 의예과 2학년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4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지난 7일부터 대면 강의로 전환했

다. 그러나 대면 강의로 전환했음에도 의대생 대다수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실제 강의실은 대부분 비어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선대 의대 또한 복학생·신입생들의 수업 참여가 저조해 대다수 수업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소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제적을 피하기 위해 일단 대학으로 돌아온 뒤 수업 거부 방식으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는 셈이다.

전남대와 조선대는 결석에 따른 징계보다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독려하는 데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나이가 대학들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학생들의 수업 참여 동향 등을 공유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실제 수업 참여율로 결정하기로 해서다.

한 대학 관계자는 “학생들의 결석에 대한 징계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결석이 장기화할 경우 향후 졸업과 수련 과정에도 여파가 만만치 않아 걱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학과 교수 단위로 학생들을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남구, 빚고을 공예창작촌 입주 작가 모집

광주 남구가 빚고을 공예창작촌 입주 작가를 모집한다.

이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공예인의 창작활동 증진을 위한 것

으로, 선발 인원은 3명이다. 신청 자격은 현재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이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공예작가 또는 예비 창업자이다. 또 창작·전시 활동과

시설관리를 잘 이행해야 한다. 남구는 다음 달 초까지 입주작가 모집을 공지에 뒤 오는 5월 8~10일 신청서를 받는다.

궁금한 내용은 빚고을 공예창작촌(062-674-2070) 또는 남구청 문화관광과(062-607-2322)로 문의하면 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예보 06:06 | 날씨 17:32
예보 19:02 | 날씨 05:08



광주	☀️	8~24
목포	☀️	6~19
여수	☀️	11~18
순천	☀️	8~21
구례	☀️	6~24
광주	☀️	4~21
임도	☀️	7~20
흑산도	☀️	8~16
고흥	☀️	6~20
진도	☀️	6~19

목포	미물(고)	01:21 / 13:41
흑산도	미물(저)	06:36 / 18:55
여수	미물(고)	08:25 / 20:45
흑산도	미물(저)	02:10 / 14:25

위조지폐 사용…징역형 구형

만년필 ○위조지폐를 사용한 40대남성

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변론절차를 종결.

A씨는 지난 2월부터 4월 사이 광주에 위치한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

A씨는 지역 한 예매당에 놓인 5만원권 모양의 가짜 지폐 25매를 출점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이후 A씨는 광주의 한 식자재 마트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겠다’며 위조지폐를 내민 뒤 거스름돈을 받기도.

조사 결과 출소 3개월 만에 해당 범죄를 저지른 그는 마트에서 수십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나. 임영진 기자 looks@

‘오월어머니 노래’ 잇단 잡음…공연 열릴까?

한달 앞두고도 대행 업체 미선정…30% 불참 의사

참가자 임의서명 논란…‘억지 추진’ 내부 목소리도

‘오월어머니의 노래’ 공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행업체 미선정, 불참자 속출 등 각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관련 사업 추진에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 따르면 올해 ‘오월어머니의 노래’는 국내·외 2회 공연을 추진한다.

첫 공연은 5월24일 국립아시아문화전

당에서 진행되며, 6월 중에는 일본 해외 공연도 계획됐다.

공연 일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공연대행 업체는 선정되지 않은 상태다.

ACC는 지난 1일 사업 우선 계약 협상업체가 ‘제안서 협상 결과 불성립’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관련 지침에 따라 차순위 A업체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A업체의 공연 비전문성, 해외

공연장 섭외 미확정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제대로 된 취지에 맞는 공연이 이뤄질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논란이 지속되면서 공연 참가자인 오월어머니 15명 중 5명은 아예 무대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나머지 참가자들도 공연에 불참하고 싶으나 일부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의사를 드러내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업체가 출연자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참가 동의서에 대해 어머니들은 관련 내용을 전혀 듣은 적도, 서류를 본 적도, 서류에 서명한 적도 없다고 맞서고



‘오월어머니의 노래’ 공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행업체 미선정, 불참자 속출 등 각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관련 사업 추진에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있다.

공연 참가자 B씨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해당 업체에 절대 무대에 서지 않겠다고 회신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참가자 대부분이 무대에 나서 것을 꺼리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입센 이들에게 말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분위기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ACC 내부에서도 해당 공연

사업을 두고 역지성, 무리한 추진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의혹에 A업체는 사실무근이라는 반응이다.

A업체 관계자는 “해외 공연장 섭외가 아직 안 된 것은 사실이지만 참가 동의서 임의 서명은 사실이 아니다. 현재 어머니들에게 참가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ACC와도 사업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공연을 주관하는 ACC는 공연이 당초 취지에 맞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ACC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을 겪은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트라우마 치유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에 맞게 공연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